



낙동강 - 최소한 '지금의 모습은 안 된다'는 공감대 확산

- 최고의 기대감은 '자연 재해의 최소화,' 찢끔찢끔 투자 의 한계 뛰어넘어야 -

2007년 대선을 정점으로 근 3년간 끌어온 운하 논쟁이 낙동강을 포함, '4대강(낙동강·한강·영산강·금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정돈되고 있다. '운하나 아니냐는 정치적 공방' 혹은 '개발이나 보존이냐는 환경적 대립각'은 여전하지만, 강(江)을 살리자는 지극히 당위적인 구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낙동

강을 어머니 젖가슴처럼 껴안고 있는 대구·경북 나아가 부산·경남 등 영남권은 낙동강이 최소한 지금의 모습은 아니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을 달지 않고 있다. 물류 수단으로서의 운하는 차치하고라도 만성적 홍수, 수량 부족, 양질의 식수와 공업용수 확보, 광활한 낙동강변의 친환경적 개발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정책은 그 같은 여망의 첫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정치적 역풍에 좌초된 운하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한 김관용 경북도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박맹우 울산시장 등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5월 23일 대구스타디

움에서청와대외국회에제출한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제목은 낙동강운하조기건설을위한공동건의문 이었다. 낙동강의벚길 정비와 치수 기능을 강화하고, 생태계 복원을위해서는낙동강운하건설이필요하다는 촉구였다. 낙동강운하를분명히못박은것이다.

그러나 운하에 대한 이러한 열망은 곧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 시위와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 하락,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명박대통령은급기야 ‘국민이원하지 않는다면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2009년 6월 19일특별기자회견)고선언하였다. 한 반도 대운하란이명박 대통령의트레이드마크공약이꼬리를내린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부터 예고돼 왔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2009년 말 대선 직후 ‘한반도대운하에대한전망’과관련하여영남일보와의인터뷰에서 ‘대구로서는운하의혜택이그어느지역보다나은것은틀림없다. 다만향후물과상수원문제에대선이후 전열을 정비해 다시 등장할 새로운 뉴레프트 진영이 환경을 명분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다면, 상당한 고비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측은정확했던셈이다.

뉴딜로 살아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운하든 강 정비 사업이든 간에 영남권에 서도 지역의 젖줄인 낙동강의 방향을 놓고, ‘정책의색깔과용어 가미묘하게변화해왔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초 야심차게 출범시켰던 ‘낙동강 운하추진단’을 지난해 7월들어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 으로슬그머니 바꿔버렸다. 이후운하란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물길 정비나 물길 잇기로 순화된 정책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여 기다 지난해 10월에는 세계적 환경 행사인 제10차 람사르총회가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을 주제로 경남에서 열리면서 운하는

완전히 잠복했다. 5개 광역자치단체 사이에는 민감한 시기에 운하나 물길 잇기를 꺼내는 것은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묵시적동의가있었다.

국토4대강이다시부상한것은경제위기 탓이었다. 특히, 미국이오바마를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뉴딜로국내에 알려진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구축 정책이 대대적으로 발표되면서, 국내에서는 4대강물길정비및 연안 개발 이 경제 위기를 타개할 안성맞춤식 정책 대안으로 떠올랐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지난해 12월 1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정비를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정의했다. 급기야이명박 대통령은 “운하면 어떻게 4대강 정비면 어떠냐”고 한 데 이어, 지난해 15월 3차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에서 “여러 행정 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속소시켜바로착수할수있으면좋겠다.

그래야 지방 경기가 살아난다’고 피력했다. 4대강정비사업을염두에두고이를독려한 것이다.

첫 출발

지난해 12월 29일 4대강 중 낙동강 정비 사업이안동에서첫삽을떴다. 돌고돌아온 대운하 논쟁이 4대강 정비로 안착한 것.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도 명국 대우증권 상근감사(전 대구경북연구원 책임연구원)는 이를 놓고 “대운하는 작명을 잘못해서 표류한 정책 이라고 진단했다. 거창한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낙동강정비같은사업에는손을대지못한채 질질끌려왔다는것이다. 그는 “작금의경제

낙동강 물길 정비사업의 예산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6조원 가량이다. 이에대구·경북을비롯해 낙동강수계에 위치한 5개광역자치체(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는크게반색하고있다.



위기를 타개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추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남겨진 숙제이지만, 현재로서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 프로젝트'를 환생시킨 셈이다.

15년 동안 퍼부었지만

정부가 공언한 낙동강 물길 정비 사업의 예산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6조 원가량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대대적인 투자 정책 의지에 대구·경북을 비롯해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5개 광역자치체(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는 크게 반색하고 있다. 안그래도 '절끔절끔 투자'로 대안을 찾지 못하던 버려진 강을 국가 차원에서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낙동강에는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됐지만, 홍수 방지와 수질 개선에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기간 하수정비에 6조 5,200억 원, 하수관거에 3조 5,990억 원, 산업폐수 처리(2,460억 원), 오염하천 정비(2,210억 원), 축산 분뇨(1,450억 원) 등 무려 10조 8,780억 원이 투입되었다.

반면, 이러한 천문학적인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의 C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물론 난분해성 유기물질 오염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의 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낙동강(물길)의 산업폐수 배출업소는 7,17개로 한강의 2.9배(2,47개), 금강의 17.4배(41개)에 이른다.

일일 평균 폐수 방류량도 53만 5,744t로 금강(대청호 기준)에 비해 70배나 높다. 관리에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실제로 1997년 3월 구미 두산전자의 폐물 오염 사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낙동강 유역에서만 모두 13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수질 오염사

고가 발생했다. 국내 하천 중 홍수 피해 규모가 가장 크다. 강의 유역이 광범위하고 길어도 길지만, 그에 부응하는 치수 관리의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홍수 등 낙동강 자연재해 사전 예방 투자비는 1조 1,000억 원이 들었지만,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4조 2,000억 원이 들었다. 일본의 경우 사전 예방 투자비가 복구 비용보다 4배가량 많다. 정반대의 치수 정책이 펼쳐진 셈이다.

치수 전반의 허점

여기다 낙동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국토 전체의 환경 관리 허점도 지적된다. 우선, 도시화의 진전으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 도로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하천이 직강화된(물줄기를 직선으로 개조)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광범위한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Pollution, 특정 지역이 아닌 불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관리도 문제이다. 예를 들면 논밭에 뿌려진 농약과 비료, 축산 분뇨, 자동차로부터 누출된 기름 등이 빗물에 휩쓸려 하천으로 유입되고, 강을 오염시킨다.

이런 점들이 맞물리면서 하절기 집중 강우 시에는 홍수 위험이 높은 반면, 갈수기에는 하천의 물이 부족하고 수질 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악순환을 연출하고 있다. 남광원 대구경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강수는 1년 중 7~9월까지 내리는 비가 전체 강수량의 70% 이상을 차지해 나머지 기간은 강수량의 30%만으로 생활·농업·공업용수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물 관리가 항상 불안한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주변, 즉 수변구역 내 사유지 매입도 상대적으로 낙동강이 떨어진다. 사유지를 매수해야 하천으로 완전히 편입해 치수 대책 공사 등을 할 수 있다. 낙동강 전체 대상 면적(4,598km²)의 0.1%(4.71km²)에 불과하

다. 이는 한강(0.43%)나 영산강·섬진강(0.58%) 토지 매입 비율보다 낮다. 이런 연유로 낙동강 주변 제방들은 이미 낡고, 최근 이 상기 후로 인한 집중 호우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높이가 높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강 바닥에는 퇴적층이 쌓이고 유량도 적다.

획기적인 대책 절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 학계는 낙동강 물길 정비 사업의 첫 번째 목표로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꼽는다. 이어 '하천 생태계 복원과 휴식 및 레저 공간 확대를 통한 생산적 개발'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사 퇴적 구간 정비, 하천 변저류지 조성, 저수지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수변구역 내 사유지를 매수해, 하천 생태계 복원 작업을 위한 공간(부지)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건설 사업과 함께 환경부(수질 개선 및 생태 복원), 국토해양부(수량 확보, 홍수 방재), 농림수산식품부(농업용수), 행정안전부(소하천 관리) 등으로 흩어진 하천 관리 주체를 통합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 물 관리(Integrated Water Management)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지흥기 영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낙동강 권역의 생활·공업·농업·유지용수 수요는 현재 10억 m³에서 2012년 11억 m³로 8.2% 증가하는 반면, 공급 가능한 수량은 여전히 10억 m³에 불과, 8억 8,900만 m³가 부족하다"며, "수량을 확보하지 않고 낙동강이 처한 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강 주변의 농업용 저수지 확대와 중소형 댐 건설

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재일
영남일보 기자
park11@yeongnam.com